

與 “통합당 방해하면 내일 단독 원 구성”

여야, 복지·산자위 증원 상임위 정수 조정 합의 원내대표 회동 무산...민주 “지체 안돼” 최후통첩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소벤처기업위원회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21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취소됐다.

이날 국회는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렸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점을 반영해 증원이 이뤄졌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 각 1명씩 줄었다. 따라서 과방위는 20명, 외통위는 21명, 문체위는 16명이 됐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주요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부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등이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조정을 전제로 원구성 법정시한(8일)을 넘겨 오는 12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최대한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포함해 돌파구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오는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

키는 것이다”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정수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 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꾀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내년 초까지 국난극복 총력체제로 가동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원 구성이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은 일하는 국회다. 통합당이 6월 민주항쟁의 교훈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의정실에서 오늘 회동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통합당과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며, 내일 회동 여부는 의정실에서 다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통합당 김성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할 때는 보통 의정실에서 대표 일정을 보고 협의를 한다. (의정) 비서실이 일정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 예의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과 발 맞추는 국민의당

안철수, 김종인표 기본소득·전일보육 공개 찬성

국민의당이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귀국 이후 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 의정적 이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선 이후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념을 넘나드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부쩍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전일보육제 언급에는 2018년부터 공약으로 내놓았던 “온종일 초등학교와 궤를 같이한다”며 당 논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야당이 축소되는 등 여건에 변화가 있었고 통합당도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가 꾸준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는 오픈마인드”라며 “방식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당 입장에서 활로 모색이 절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해버린 입법 지형을 고려하면 통합당 입장에서 야권 연대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만나고 하면 만나보는 것이 피할 건 없다”며 안 대표와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가칭)을 결성한 것도 눈길을 끈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통합당 유의동 김병욱 김용 윤희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민생당 “연내 전당대회”

광주서 총선 참패 사죄

민생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 부활에 나선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소한 12월 안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다 젊고 개혁적인 당으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책을 같이하는 다른 단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통합신당을 위한 전당대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힘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이 이렇게 무너진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당 전체가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당의 주체 세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해 “당은 당원들을 소외시켰고 당원들은 당을 부끄럽게 느끼게 됐다. 끝없는 당권 싸움에 국민들은 민생당을 버렸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중대한 실수였고 그 이후의 분열된 모습은 더 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생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오른쪽 네번째)과 박지원 전 의원(맨 오른쪽) 등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이어 나갈 것”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이용섭 광주시장 추모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열렸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인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가족과 각계 인사 50명만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일반 시민 등 150여명도 묘역 아래 모여

고인의 1주기를 함께 추모했다. 유산 다름중심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철 의원 등 유가족들도 자리를 지켰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았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

대표와 아나연 인재교 김한정 노웅래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 동교동계 한광욱 박지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김광진 청와대 정부비서관도 자리했다. 추장관은 행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희호 여사 1주기를 맞아 추모사를 내고 고인을 기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운영덕 ‘5·18 계엄군 유공자 자격 취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운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운영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

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원이 ‘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